

강경책 실효성 의문 '반대' 고수할 듯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물밑으로 느껴지던 북한 미사일 사태 해법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시각 차이가 점차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 한국과 미국·일본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각국이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가면서 그 수위를 놓고 무시할 수 없는 이견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서 이런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종석 통일부

대북제재 시각차 속 우리정부의 선택은 과도한 대북 압박 오히려 역효과 통일축전 대표단 파견 시비 가능성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과 제재만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이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추가 제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미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의 실체를 넘어 과도하

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지만 ‘반대’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에서 함축 톤은 높아진 느낌이다. 특히 이 장관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군비 확장 단계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이견은 오히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이 설사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유엔 대북 결의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에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다음달 열리는 8.15통일대축전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참석을 강행해야 할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때보다 더욱 약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해 불참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히로히토 ‘합시불쾌’ 메모 공개 日정가 파문

일본 쇼와천황(1901-1989)이 A급 전범의 합사 후 참배중단을 결심한 사실이 20일 당시 측근의 메모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두달여 앞둔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8·15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설처럼 나오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메모'의 공개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 '야스쿠니'가 북한미사일 등 '안보'를 누르고 총재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솟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미사일 이후 유엔 결의안 처리를 주도

일본 정가와 주변에서는 '메모'가 전격 공개된 '정치적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두달여 남긴 시점이기 때문이다. 소시통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8.15 참배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아베 장관의 집권을 반대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세력들이 견제 또는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쇼와천황이 A급 전범의 합사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단속적으로 제기돼온 이른바 '분사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총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4인방 가운데 최대 경쟁자인 후쿠다 전

고이즈미 8·15참배 포기하나?

야스쿠니 분사론 고조...선거 쟁점으로 부상

총재선거 두 달 남기고... '아베 견제용' 촉각

하며 '포스트 고이즈미' 공허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스쿠니에서 A급 전범 분사론에 공감하며 아시아외교를 중시해온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존재가 다시 주목을 받을 듯 주목된다.

우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해온 고이즈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참배를, 특히 정권공약이었던 8·15 참배를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유력한 차기 총리인 아베 관방장관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아베 장관은 20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순국한 사 람들에 대해 존송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하는 행위"라며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두둔했다.

A급 전범 분사를 추진해왔던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존재가 거듭 세인의 주목을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방장관은 무종교 국립추도시설건립을 골자로 한 분사론을 주장해왔고 그를 중심으로 한 의원모임이 최근 이를 정식 제안했다.

강경파인 아소 다로 외상조차 야스쿠니신사를 종교법원에서 국가시설로 바꾸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A급 전범을 분사하자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정부가 종교법원에 분사를 지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현실론이다.

분사론은 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침략주의 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 당시 일본 총리 등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合祀)된 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1985년 8월15일 공식 참배를 감행,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美 의회,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북한비확산법안' 상정...北 인권 압박 체제변화 유도

미 상원은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 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비확산법안'을 조만간 상정, 심의할 것이라고 샘 브라운백(캔사스) 상원의원이 19일 말했다.

이 법안 공동제출자인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미국)는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도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북한비확산법안은 지난 14일 미 상원에 제출됐으며,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후 미국측의 첫번째 관련 입법 조치라는 점에

서 주목된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체제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게 문제"라면서 "우리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데만 집중하면 우리는 '북한 체제'라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소련이 도덕적 부당성 때문에 붕괴했던 것처럼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을 탈출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체제)에 압력을 넣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 동유럽에 적용됐던 헬싱키협약과 같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새로운 안보 틀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같은 구상을 토대로 조만간 백악관이 새로운 동북아 안보틀을 마련하도록 촉



미 상원 샘 브라운백 의원 (공화·캔사스주)이 19일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량 살상무기관련 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비확산법 개정안 통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싱키 협약이란 지난 1975년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서방은 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공산권 붕괴를 촉진시켰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북한인권운동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 합격자 배출! 한국최다 합격자 배출!

7월 3일 10시 30분

361-8111

제주도 자갈등 축제

외교관5명, 총리, 원무청

071-1332, 011-604-7327

(株) 행복출판사

www.happybooks.com

10001-507-3588

이태리가구 전문점

홍 스키이스.kr

100459.com